



환경이슈

환경부 장관, 폐기물 에너지화 총력전

환경부 장관과 차관이 주관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 순회설명회가 지난 6월 25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7월 18일 강원도를 끝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 설명회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선 자치단체장에게 장관이 폐기물 에너지화 및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이었는데, 설명회장 마다 광역부단체장(일부 시·도지사 참석)·기초단체장(일부는 부단체장 참석)은 물론,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설명회는 지난 6월 25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6월 27일 동남권(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7월 1일 호남권(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7월 11일 대경권(대구시, 경북도), 7월 14일 충청권(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7월 18일 강원도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제주도는 7월 10일 개최된 한국환경한마당 행사시 병행 설명).

권역별로 순회설명회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초고유가시대 및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의 폐기물 에너지화의 중요성은 물론,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세계 어디를 가나 화두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고, 이의 대응을 위하여는 각론 부문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명회 내용을 완전히 소화해서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듯이 관할 공무원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 NGO, 지역주민, 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확산·전달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본 순회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부문에서는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경제성,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EU·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소개와 더불어 2012년까지의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의 추진목표와 추진방안, 에너지화시설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 국내외 대응현황 설명 등과 더불어, 특히 환경부의 소관이자 지자체 관리영역인 수송·상업·가정·건물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및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광주광역시·과천시의 탄소포인트제, 부산광역시의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창원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도 소개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한결 같이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과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시의적절성에 동감하면서 많은 질문과 건의를 했다.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하여는 시설설치 국고 지원비율 상향조정, 광역화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기물에너지타운 건설에 따른 기초지자체

간 협의·조정, RDF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대도시 주변지역의 청정연료사용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고, 음식물쓰레기(음폐수), 하수슬러지 에너지화에 따른 기술지원 및 표준공법 제작·배포, 소각시설의 에너지화시설로의 대체방안, 매립가스회수 및 CDM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는 지자체 차원의 인벤토리 구축문제와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행상의 애로점(자동차 전용도로 확보를 위한 재정적 문제, 통근·통학시 사고처리의 법적 문제점 등)등이 제기됐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폐기물 에너지화와 기후변화대응 문제 외에도 조류독감과 상수도 문제, 소양강상류 토사유출 방지방안, 군부대 주둔이 많은 지자체에 대한 오폐수 처리·상수도사업 예산지원 확대 요구 등 지역 현안문제들도 건의 및 토의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 순회설명회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되,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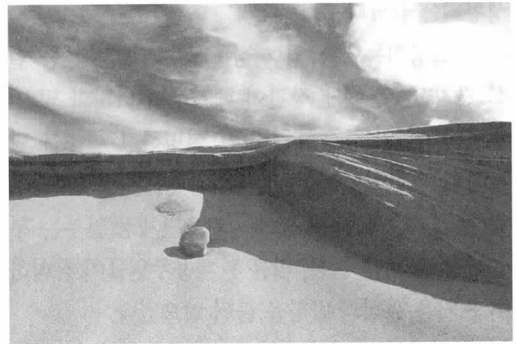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건의사항 중 폐기물 에너지타운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협의·조정,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자문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지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RDF사용을 위한 대도시지역의 청정연료사용 규제완화, 광역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국고 지원 비율 상향조정 문제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기후변화 대응 해외 우수사례집 및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오는

2010년까지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계 DB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중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지방합동의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후변화 e-뉴스레터·제공 등 지자체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도 총력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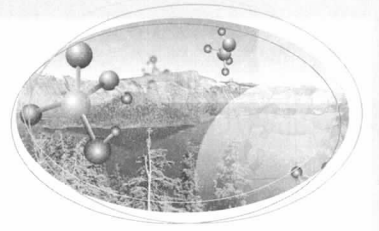
한중일 3국 동북아 황사대응 논의



환경부는 지난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2008 한·중·일 황사공동연구단 회의(제2차 운영위원회 및 제1차 실무그룹 I & II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측이 주도하는 2008년 황사대응 공동연구사업을 한·중·일 3국이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황사전문가와 정부 대표로 구성된 한·중·일 황사공동연구단 운영위원과 실무그룹 30여명이 참가하여 2008년 황사공동연구계획 수립, 3국의 황사연구 현황 평가 및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7일 개최된 제1차 실무그룹 I & II 회의에서는 황사 모니터링·조기경보체계 구축 분야 및 황사



발생 방지·통제 분야에서의 2008년 황사대응 연구사업을 3국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3국간 황사발생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무그룹 I (팀장: 국립기상연구소 김승범 박사)에서는 3국 실무그룹 구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사례에 황사집중분석 및 황사관측능력 배양 공동연구'를 2008년 실무그룹 I의 추진과제로 선정하였고, 실무그룹 II (팀장: 국립산림과학원 정용호 과장)에서는 '사막화 생태복원을 위한 성공요인 분석 및 개선모델 개발'을 2008년 실무그룹 II의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18일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간 3국에서 추진된 황사연구 현황을 실무그룹 I & II로부터 보고받고 그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 실무그룹에서 선정된 2008년 황사대응 공동연구사업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 운영위원회 수석대표(환경부 김용진 해외협력과장)는 그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황사관련 연구현황, 성과 등의 정보가 3국간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그룹 I & II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현황을 조사·발표함과 더불어, 각국에서 축적된 연구 자료를 Website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3국의 합의를 얻어 내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2008년 황사대응 공동연구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Website에 게시하고, 「제3차 한중일 황사대응 국장급회의」와 「제1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3국의 운영위원들은 한국측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환경부 김용진 해외협력과장은 이번 회의가 동북아 황사대응을 위한 한·중·일 황사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최초의 회의라고 평가하고, 이번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한 황사대응 3국 협력분야에서 첫 수확을 거둔 만큼, 향후 여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서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람사르총회 D-100, “지구촌 환경축제로 만들 것”

지난 7월 20일 2008람사르총회 개최 D-100일을 맞아 환경부(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는 지구촌 환경축제인 이번 총회를 역대 최대규모의 성공적 총회로 개최하기 위해 UNEP과 WHO의 사무총장을 초청하는 등 총회 개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탄소상쇄기금 조성,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자동차, 자전거 활용 등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국제회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총회(2008.10.28~11.4 경남 창원)를 위해 회의 및 행사 준비, 숙박·교통 등 하드웨어 구축, 습지 인식증진 활동 등 각 부문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전체회의와 지역회의 등 공식회의와 개회식과 환영연 등의 특별행사는 람사르협약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7월1일 UNEP과 WHO 사무총장 등 개회식 참석 국외인사에 환경부장관과 람사르협약 사무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의 이동거리에 따른 탄소배출량에 근거한 탄소상쇄기금을 조성하고, 자전거와 하이브리드 카를 활용하는 등 환경총

회로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숙박과 교통 등 총회 개최를 위한 하드웨어 부문은 경상남도 및 행사대행업체(PCO)와 협조하여 준비해 온 결과, 공항과 숙박시설, 회의장을 잇는 셔틀버스 운행과 공항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우포늪·순천만 등 주요습지를 방문하는 공식탐방 코스 8개를 확정하였으며, 6월부터 총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전시·관광 예약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다.

람사르총회 기간 동안 회의장으로 사용될 창원 컨벤션센터(CECO) 증축이 8월 공사완료로 앞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통역, 식·음료 등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회의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축제가 되도록 CECO 전시장 내 홍보관 운영 및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과 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총회 유치 이후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람사르습지 및 습지보호지역 확대, 람사르총회 공식홈페이지 구축, 습지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을 전개했으며, 향후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를 추가 지정하고 도심 속 우수지를 생태습지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습지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바, 습지체험 프로그램 운영·생태가이드 양성·학교에서 습지교육 실시 등의 성과를 올렸고, 향후 경남 습지 로드맵과 보전계획을 수립

하고 따오기 복원 등 다양한 습지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회 개최를 지속적 습지보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창원선언문 채택과 동아시아 람사르센터 유치 등 post-람사르정책도 추진한다.

창원선언문은 람사르협약의 현안과제와 비전을 담아 총회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하고, 총회 이후 매년 창원선언 이행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람사르습지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습지교육,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협력사업을 본격화하고 동아시아지역 습지보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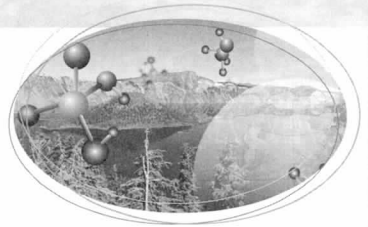
이외에도 경남도는 지역 내 습지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습지의 지속적 관리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병욱 람사르총회 준비위원장(환경부차관)은 “제10차 람사르총회는 165개국 정부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NGO등 총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총회로, 환경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전 세계가 함께 습지의 가치를 공유하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방법을 모색하는 등 세계적인 지구촌 환경축제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대학과 정부교육기관이 공동으로 환경기술인력 양성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의 환경전문교육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 이필재)과 동덕여자



대학교(총장 : 손봉호)는 지난달 24일 「환경측정분석분야 대학생 학점인정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시험·분석기관, 환경산업체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인력을 학·관이 상호 협력하여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은 측정분석 이론교육에 집중하고, 실험실습은 첨단기기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포진되어 있는 인력개발원이 전담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학점인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은 응용화학과, 보건관리학과 등 자연과학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실시되며 교육내용은 환경측정분석이론(48시간) 강의와 측정분석실습(48시간)교육으로 진행되고,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측정분석실습교육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원자흡광광도계(AAS) 등을 활용하여 유기물질, 중금속, 일반항목을 직접 전처리하여 분석하며, 정도관리와 측정결과 통계처리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측정분석실습교육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매회 박사급 강사가 직접 개인지도(실험실별 16명 수용, 총 32명)로 진행하게 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측정분석실습과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울 및 수도권지역 대학과의 환경측정분석분야 학점인정제 협약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측정분석분야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천년된 해안사구 보전추진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남 보령의 원산 해안사구 및 오봉 해안사구와 전북 고창의 광승 해안사구에 대해 지형, 식생, 동·식물상 등을 조사한 2007년

도 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산사구와 오봉사구는 충남에서 두번째로 큰 섬인 원산도의 남쪽해안에 위치한 해안사구로서, 모래시료에 대한 광여기(光勵起)루미네선스(OSL, 불임참조) 연대측정 결과 두 지역 모두 최소한 7,000년 이전의 고(古)환경기록이 보존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안의 발달과정과 해수면 변화 연구와 관련하여 학술적 보전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사구에서는 표범장지뱀, 말뚝가리, 새홀리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4종과 소통구리붙이, 모래저저리 등 사구성곤충 22종이 관찰되었으며, 오봉사구에서는 매와 표범장지뱀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2종과 사구성곤충 11종이 확인되어 생태적 가치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원산사구에서는 사구서식형 도마뱀인 표범장지뱀(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의 서식 밀도가 매우 높게 관찰되었으며, 서해안 해안사구의 전형적인 곤충상을 나타내어 보전가치가 높았다.

원산도의 해안사구는 한때, 규사채취로 일부 훼손되어, 해안침식과 농경지 침수 위험을 겪은 바 있다. 그 후 사구보전을 통해 침수 위험에서 벗어난 곳으로 자연적인 방파제로서의 사구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전북 고창의 광승사구는 환경부의 2001년 조사당시에 비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사구와 모래사장 사이에 건설된 해안도로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충남 보령의 원산, 오봉사구에 대해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검토 등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발간된 보고서는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K)